

# 부동산 보이스피싱 피해 느는데 은행은 지급정지 요청 나몰라라

## 정상 거래로 보인다며 외면... 피해자들 분통

♣. 광주시 북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최근 한 생활정보지에 가게 임대 광고를 했다. 광고 직후 자신을 부동산업자로 밝힌 사람이 두 차례 전화를 걸어왔고, 조건이 마음에 들어 부동산업자가 요구하는 '상가 권리평가 내역서' 발급 비용 44만원을 상대 계좌로 입금했다. 그런데 그 부동산업자는 또다시 '공중공표' 비용을 요구했고, 이씨는 그제야 본인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식당 처분이 급했던지라 전화만으로 상대방을 너무 믿었던 탓이다. 이씨는 곧장 112와 상대 계좌인 우리은행에 신고를 했다.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위해서다. 이씨는 은행의 대응에 더 화가 났다. 은행 측이 112상황실 직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경찰의 요청에도 은행 측은 피해자의 말보다 '거래'로 보인다라는 말만 반복했다"며 "경찰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난 뒤에 지급정지 요청을 가능하다는데, 사건 접수 후에는 돈이 이미 출금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화상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보이스피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홍보 강화로 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 사라진 반면, 2000년대 중후반 피해자가 속출했던 '부동산 보이스피싱'이 다시 유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화사기'를 보이스피싱으로 판단하는 경찰과 달리, 일선 은행들은 이를 보이스피싱 사례 유형으로 구분하지 않아 즉각적인 대응과 경찰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5일 광주 일선 경찰서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생활정보지와 인터넷 등이 개인 신분으로 급매물을 내놓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은 서민들의 조급한 마음을 이용하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사칭해 생활광고지나 인터넷 등에 나온 부동산 매도자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조건을 내세우며 권리금 감정평가서 발급 비용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피해자

들은 권리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피해를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상가나 주택 임대 광고자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조건의 매수자가 나타났다면 광고비를 요구 후 잠적하는 형태도 있다. 은행들은 '부동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상대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은행은 전기통신금융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 계좌 지급정지를 할 수 있지만 '부동산 보이스피싱'의 경우 '보이스피싱'이 아닌 '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전기통신금융법에서는 보이스피싱, 즉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해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전화사기는 통신상으로 상대방을 기망해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이 맞고, 계좌입수 영장도 보이스피싱으로 받고 있다"며 "이런 사건에는 계좌정지가 중요한데 은행 측이 '몰래 피싱'과 '부동산 피싱'에 대한 계좌 정지를 받아들이주지 않아 수사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보세화물 편의 제공 대가 뇌물 받고 아내 취업 시키고 업체 유착 광양세관 직원 구속기소

### 광주지검 순천지청

보세화물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을 받은 세관 직원이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수입 절차를 끝내지 못한 외국화물(보세화물)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 등으로 20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광양세관 직원 A(5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광양항 내 한 창고업체 대표 B씨로부터 보세화물 입출항 관련해 편의 제공 명목으로 총 25차례에 걸쳐 1087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광양항 입주를 희망하는 한 업체 대표 C씨에게 입주 평가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해당 업체에 자신의 아내를 취직시켜 급여 명목으로 909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18일 발전소 원료로

쓰이는 목재펠릿을 수입하는 B씨를 검찰이 사기혐의로 구속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씨는 최근까지 수년 동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등지에서 들어오는 수입 펠릿 속에 왕겨와 나뭇조각 등을 섞어 부피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입액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B씨의 수입 펠릿이 정상적인 제품이 아닌데도 세관을 통과해 납품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은 향반을 통해 수입업을 하는 업자와 공무원 간의 또 다른 유착이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 불륜 교육공무원 '감봉 징계 부당' 소청 기각

### 광주교육청 "품위 유지 위반"

학원장과 불륜 관계에 빠진 교육공무원이 감봉 3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청이 기각됐다. 2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소청심사

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어 교육공무원 A씨가 "개인 간의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청을 기각했다. 소청심사위원들은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혼인한 상태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공직자로서 바른 자세가 아니라며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 처분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학원장 남편의 제보로 교육청 감사를 받았으며 지난 6월 감봉 3개월의 처분이 내려지자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데도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을기자 dok2000@



26일 고(故) 백남기 농민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서울=사진공동취재단

## 백남기씨 부검 영장 기각... 유족측 "장례 무기한 연기"

### 대책위, 검찰 재청구 검토 반발

###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촉구

25일 운명한 보성 농민 고(故) 백남기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하지만 검찰이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백남기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백남기 대책위 측은 26일 "백남기 농민이 운명함에 따라 대책위를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살인정권 규탄 투쟁본부'로 전환한다"고 밝히면서 강력한 대정부 투쟁 의지를 밝혔다. 백씨 장례와 관련하여 대책위 관계자는 "유족 측은 납득할만한 정부 조치 전까지 장례 일정을 무기한 연

기하겠다는 뜻을 대책위에 전해왔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정부를 향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될 때까지 투쟁을 지속한다. 경찰 물대포에 의한 사망이 명백한 만큼 검찰의 시신 탈취를 막아낼 것"이라며 백씨 시신 압수영장 재청구에 대한 반대 입장에 재확인했다. 이날 오후 7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서 추모 촛불 문화제를 개최한 대책위는 "특별검사를 도입하고 살인 물대포를 추방해 다시는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면서 "특별검 도입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매일 오후 7시에 장례식장 앞에서 추모 촛불 문화제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10월1일 오후 3시 서울 대학로에서 개최하기로 한 '백남기 농민 국가

폭력 살인정권 규탄 범국민 대회'에 총력을 모아 국가폭력에 책임을 묻고, 11월12일 민중 총궐기까지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백씨 사망 이틀째인 이날 밤 광주시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광장 등 전국 주요 지역에 분향소가 설치됐다. 광주의 경우 27일 오전 10시 추모 분향소가 설치된 도청 앞 광장에서 합동 분향 및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임정발표가 예정돼 있다. 전남은 27일째 농민회 주관으로 시·군별로 분향소 설치 여부가 결정되면 추모객을 받아들일 예정이다. 백씨는 지난 25일 오후 1시58분 급성 신부전으로 사망했다. 지난해 11월14일 실종 안절전을 요구하는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지 317일째 되는 날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입찰 특혜 수사받던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순천시...유서는 발견 안 돼

'수십억 관급자재 수의계약 특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순천시 공무원이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26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9분께 순천시 서면의 한 산장 주차장에서 순천시 6급 공무원 A(55)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계약업무를 담당하던 지난 5월께 '허수도정비 종합관리지역 침수예방 사업' 추진 과정에서 콘크리트 사각 구조물인 암거블럭

17억원 어치를 수의계약해 경찰 수사를 받았다. 전남도 감사에서도 이 같은 순천시의 수의계약이 지방자치단체 입찰과 계약 집행 기준 등을 지키지 않는 등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근 순천시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장부 등을 확보한 데 이어 A씨가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증거를 확보, 지난 22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다. A씨는 지난 22일부터 휴가를 내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가족과 주변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와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도둑 맞은 8000만원 되찾아 안도  
○...한쪽 다리가 불편한 60대 농민이 소를 키우며 마련한 돈인 8000만 원을 도둑맞았다가 하룻만에 되찾아 안도.  
○~26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광주시 북구에서 소를 키우며 사는 A(65)씨는 안방에 현금 5000만원과 수표 3000만 원을 보관해 왔는데, 지난 23일 밤 9시께 집을 비운 사이 경찰에서 일하던 우모(48)씨가 훔쳐 달아났다는 것.  
○...우씨는 신고 시간까지 늦추려고 화물차 열쇠·휴대전화까지 챙겨 달아났는데 경찰은 집과 축사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범행을 확인한 뒤 추적에 나서 하룻만에 붙잡아 4100만원의 현금을 회수하고 수표도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자 구제에 주력.  
/김형호기자khk@kwangju.co.kr

사건번호		매각 물건		감정평가액	비고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b>[기타]</b>					
2015타경 15090	곡성군 옥과면 합강리 463 3157㎡ [현황공장용지]	답	680,410,500	알팔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제시외 건물중전남북성군 옥과면합강리463번지소재	
2016타경 217	동소 463 심정버섯재배사 1동 774㎡ 제시외 용도미상철구조물 등 532.8㎡, 기계기구 동소 463 심정버섯재배사 2동 196㎡ 제시외 기계실 등 41.6㎡	버섯재배사		버섯재배사	
2016타경 15090	곡성군 옥과면 월포로 267-29 396㎡ 제시외 번소 등 122.7㎡	답		버섯재배사	
2016타경 3544	곡성군 옥과면 합강리 648-1 1450㎡ [물건번호:1:기계기구목포함 [별지기계기구광정평가명세표목록 기재의일부기계기구소재물 명및광정평가명세표기계기구기호0-1,0-2는 규격저장장목포함, 기계기구일부소재물명] 제6조특별참조]	답		버섯재배사	
2016타경 3544	담양군 무정면 동산리 420 7093㎡	광장용지	1,021,434,700	광장	
2016타경 3544	동소 492㎡ 부속건물 사무실, 창고 205.43㎡ 제시외 창고 등 39.5㎡	광장	1,021,434,700	광장	
2016타경 4813	동소 1호 492㎡ 제시외 광장 등 505㎡, 기계기구목포함 [별지번호:1:광정담당별제기 기계기구목포함, 기계기구일부소재물명]	광장		광장	
2016타경 4813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86-18 211㎡	광장용지	3,655,193,040	광장용지	
2016타경 4813	동소 86-20 1595㎡	광장용지	3,655,193,040	광장용지	
2016타경 4813	동소 86-21 4866㎡	광장용지		광장용지	
2016타경 4813	동소 86-26 543㎡	광장용지		광장용지	
2016타경 4813	동소 86-29 310㎡	광장용지		광장용지	
2016타경 4813	동소 86-30 1425㎡	광장용지		광장용지	
2016타경 4813	동소 86-31 228㎡	광장용지		광장용지	
2016타경 4813	동소 86-21 1호 1790.48㎡ 283.5㎡ 2호 425㎡ [사무실, 금형보관대] 3호 200㎡ [교육장] 부속건물 화장실 34.5㎡ [물실] 제시외 창고 등 857.3㎡, 기계기구 32실	광장용지		광장용지	
2016타경 4813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산길45-2 1호 1호 200㎡ [공정, 식당] 700㎡ [공정 [창고]] 2호 200㎡ 75㎡	기숙사, 공		기숙사, 공	
2016타경 4813	동소 45-2 2호 1호 659.1㎡ 2호 575.7㎡	광장		광장	
2016타경 61915	북구 신안동 238-10 158.1㎡	대	105,578,580	대	
2016타경 61915	북구 들재매길161-3 79.02㎡ 부속건물 번소 1.62㎡ 창고 1.83㎡ 제시외 차양등 16.52㎡	주택	105,578,580	주택	

● 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거래수신고인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능할 때에는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합형일 변경으로 인한 관공정부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② 공무거래 민사합판 제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납부요청 시 또는 매수인이나 지급보증원에게서 제공한 문서[일일 보증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③ 2년 이상이 공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에게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④ 입찰행위의 무효이 원인으로 공비로 계약할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은 최고거래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년 이상의 경우에는 그 입찰자물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⑤ 최고거래수신고인과 자선취득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참가 보증금에 즉시 반환한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위원회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일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은 항상 매각결정위원회 결정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된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을 실시한다. 다만, 매각허가일로부터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후 사유없고, 매각대금에 실시하여 아니한다.  
7. 소유권 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장권, 기입장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소유권 이전청구 및 지장권이나 기입장등 말소청구를 위해서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및 지장권등 말소청구서와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등본을 첨부하고, 주민등록정보관리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축적하여 준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다른 채권자는 부동산 소유권이나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8. 주의 사항  
① 매각의 주체 또는 시가결정에 따른 매수인의 지장권 등이 불합치 납부보증금 및 매각허가결정위원회 결정 기속하고 있는 사항이거나, 해당 부동산의 실재와 청탁이 있을 때에는 그 양자합의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② 입찰인정의 청탁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허가 후유 잔여 매각대금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명세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합판(신청서)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청탁을 완료한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기 바란다.  
③ 특별매각조건에 내용은 매각결정위원회의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입찰보증에 하소할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란다.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 하소 시 사용된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유권이전등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필요한 서류는 농지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된다. 단, 토지이동거래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에 소정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다.  
⑥ 공고된 물건에 매각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된다.  
⑦ 신청된 공고하는 물건의 최종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매각일이 휴일사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고문을 게시 하였으므로 우리법원 게시문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결정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 채무자를 변제하여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매수신청인에게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⑨ 매각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ction.go.kr [법원공고 → 민법공고명세서]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정보에 불응할 경우라도 채무자로서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매각대금이 상환되거나, 대금지급기일이나 손해배상금의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청탁이 없는 물건의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일과 공고나 법원에 매각결정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6. 9. 27.

##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모창환